

#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전후 정책홍보 의제의 에너지 현저성 변화와 언론 보도 부처 맥락 재편: 주간보도계획과 빅카인즈 분석을 중심으로

황덕현<sup>†</sup>

연세대학교 기후변화에너지융합기술 협동과정 박사수료/뉴스1 경제부 기후환경전문기자

## Energy agenda salience and ministerial context in press plans and news coverage before and after the launch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Hwang, Deokhyeon<sup>†</sup>

Ph.D. Candidate,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limate Change and Energy Convergence Technology,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Climate and Environment Correspondent, News1 Korea, Seoul, Korea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launch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CEE) on October 1, 2025, was associated with changes in the salience of energy issues in ministry press plans and in the ministerial context of news coverage. The analysis compares 30 weeks of weekly press plans from the former Ministry of Environment with 30 weeks of plans from the MCEE. To account for the transfer of energy functions, the study supplements this comparison by coding official spokesperson briefing materials from the former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the reorganized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 BIGKinds searches of national dailies and business newspapers serve as a supplementary indicator of news coverage volume, and 400 search-result articles are manually validated to assess search-query precision and the capture of ministerial context. In the Environment-MCEE lineage, energy-direct items increased from 10 of 453 items (2.2%) to 129 of 542 items (23.8%). In the supplementary industry-ministry data, energy-direct items decreased from 85 of 511 items (16.6%) before the launch to 9 of 479 items (1.9%) after the launch. BIGKinds results indicate a similar contextual shift: energy-direct coverage rose from 13.9% to 39.0% within the Environment-MCEE lineage, while it fell from 19.5% to 11.9% within the industry-ministry lineage.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MCEE launch coincided with a shift in the ministerial context in which energy policy was communicated and covered, from an industry-ministry context to a climate-environment ministry context. The study is limited by its single-coder content analysis, asymmetric supplementary data, and search-based measurement of news coverage.

*Key words :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Energy Agenda Salience, Weekly Press Plan, BIGKinds, Agenda Building*

## 1. 서론

2025년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은 한국의 기후·에너지·환경 행정 경계가 재설정된 사건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자료는 기후정책 총괄 기능과 핵심 이행

수단인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실질적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를 제시했다(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2025). 법령 개정 이유 역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 중 원자력발전 수출과 석유·석탄·가스·

<sup>†</sup>Corresponding author : [hwang.dh@yonsei.ac.kr](mailto:hwang.dh@yonsei.ac.kr) (17th floor, 47, Jong-ro, Jongno-gu, Seoul, 03160, Korea. Tel. +82-2-397-0700) ORCID [황덕현 0000-0002-1377-8810](https://orcid.org/0000-0002-1377-8810)

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했다고 설명한다(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5a, 2025b). 이하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필요한 경우 기후부로 줄여 쓴다.

이 변화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다. 부처의 관장 사무가 바뀌면 부처가 언론에 제시하는 정책홍보 의제도 달라진다. 전력망, 전력수급, 재생에너지, 전기요금, 분산에너지, 수소, 원전 및 고준위방폐물과 같은 에너지정책 본류는 출범 전에는 주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맥락에서 다뤄졌다. 그러나 기후부 출범 이후 이들 의제의 상당 부분은 기후·환경 행정의 중심 부처 맥락 안으로 편입됐다. 따라서 조직개편의 효과는 법령이나 조직도 차원에서만 파악하기 어렵고, 실제 부처가 어떤 의제를 기자단에 제시했는지, 언론 보도에서 어떤 부처 맥락으로 에너지 의제가 언급됐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 문제를 세 층위에서 분석한다. 첫째, 부처 주간보도계획을 정책홍보 의제의 1차 자료로 보고, 출범 전 환경부와 출범 후 기후부의 주간보도계획에서 환경·에너지 의제 구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핀다. 둘째, 출범 전 산업통상자원부와 출범 후 산업통상부의 대변인 정례 발표 자료를 보완분석으로 추가한다. 셋째, 빅카인즈 검색 결과를 이용해 전국일간지와 경제일간지 보도에서도 유사한 방향의 에너지 의제 비중 변화와 부처 맥락 이동이 나타났는지를 검토한다.

연구의 초점은 기후부 출범 뒤 에너지 보도가 단순히 늘었는지에 있지 않다. 에너지정책 본류가 기후·환경 부처의 주간보도계획 안에서 어느 정도의 현저성을 갖게 됐는지, 기존 환경 의제는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에 놓였는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중심이던 에너지 보도 맥락이 기후부 중심으로 이동한 것과 일치하는 변화가 관찰되는지를 제한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 2. 이론적 배경과 분석 관점

### 2.1. 의제설정, 의제구축, 정보보조

의제설정 연구는 언론이 어떤 이슈를 얼마나 두드러지게 다루느냐가 공중이 해당 이슈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방식과 관련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McCombs and Shaw (1972)는 선거 보도 연구를 통해 언론의 보도량과 이슈의 현저성이 공중 의제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후 Dearing and Rogers (1996)와 McCombs (2005)는 의

제설정 연구가 1차 수준의 이슈 현저성에서 속성 의제와 네트워크 관계로 확장됐다고 정리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인 주간보도계획은 언론이 생산한 기사 그 자체가 아니라 정부 부처가 사전에 제시한 정책홍보 의제다. 따라서 의제설정 이론만으로는 분석이 충분하지 않다. 정부, 정당,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조직이 언론 의제의 입력 자료를 제공하고 언론 보도 의제의 원천으로 작동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의제구축 연구가 필요하다. Cobb et al. (1976)은 정책 요구가 공식 의제와 공중 의제로 번역되는 과정을 의제구축의 핵심으로 보았고, Weaver and Elliott (1985)는 지방 의제구축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의 상호작용을 분석했다. Kioussis et al. (2006, 2007)은 보도자료, 언론 보도, 공중 인식 사이의 연계를 의제구축 관점에서 검토했다.

Gandy (1982)는 정보보조(information subsidies) 개념을 통해 조직이 언론에 제공하는 자료가 뉴스 생산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설명했다. Turk (1986)도 공공기관 보도자료와 뉴스 내용의 관계를 정보보조 관점에서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 주간보도계획은 정보보조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주간보도계획은 특정 기사 작성을 보장하지 않지만, 기자단에 향후 한 주의 정책 발표, 현장 방문, 브리핑, 회의, 행사 의제를 미리 제시한다. 따라서 항목 구성은 부처가 언론에 어떤 정책을 중요하게 제시하려 했는지 보여주는 정책홍보 의제의 지표가 된다.

### 2.2. 기후·에너지 통합 거버넌스의 배경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의 결합은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흐름이다.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시스템 전환이 핵심적이라고 평가했다(IPCC, 2022). IEA (2023)는 세계 에너지 시스템이 에너지 안보, 가격 불안, 전력수요 증가,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라는 복합적인 압력 속에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IRENA (2023) 역시 1.5℃ 경로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화, 에너지효율 향상을 주요 전환수단으로 제시한다. 이는 기후정책이 배출목표 설정만으로는 작동하기 어렵고, 전력망, 전원 구성, 수요관리, 에너지효율, 산업 전환과 결합해야 함을 의미한다.

정부조직 측면에서도 기후와 에너지 기능을 하나의 부처 또는 긴밀한 정책 축으로 묶는 국제적 비교 사례가 있다. 영국의 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and Net Zero (DESNZ)는 에너지 안보, 요금 부담, 넷제로 달성을 담당

하는 부처로 설명된다(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and Net Zero, 2024). National Audit Office (2024)도 DESNZ의 소관, 계획, 예산을 검토한 부처 개요 자료를 통해 에너지 안보와 넷제로 정책이 하나의 행정 포트폴리오 안에서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기후부 출범 역시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기후·에너지 통합 행정의 국내적 실험으로 볼 수 있다.

### 2.3. 정부조직 개편과 보도 의제

정부조직 개편은 정책 권한의 이동이자 보도 의제의 재분류 과정이다. 법령상 에너지 사무의 상당 부분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부로 이관되면, 언론은 동일한 전력망·재생에너지·전기요금 이슈를 과거와 다른 부처 맥락으로 다루게 된다. 이는 전체 에너지 기사량의 변화와 별도로, 에너지정책이 어떤 부처 이름과 함께 기사화되는지를 바꿀 수 있다.

이 점 때문에 본 연구는 두 비교축을 구분한다. 첫째는 환경부에서 기후부로 이어지는 기관 승계축이다. 이 축은 환경부 계열 부처의 주간보도계획과 언론 보도에서 에너지 의제 현저성이 어느 정도,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는지 보여준다. 둘째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부 대변인 정례발표 자료에서 에너지 직접 의제의 현저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검토한다. 연구문제 3은 빅카인즈 수록 전국일간지·경제지 보도량에서도 유사한 부처 맥락 이동과 에너지 의제 비중 변화가 확인되는지 분석한다.

### 2.4.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은 기후부 출범 전후 환경부·기후부 주간보도계획에서 에너지 직접 의제의 현저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한다. 연구문제 2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부 대변인 정례발표 자료에서 에너지 직접 의제의 현저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검토한다. 연구문제 3은 빅카인즈 수록 전국일간지·경제지 보도량에서도 유사한 부처 맥락 이동과 에너지 의제 비중 변화가 확인되는지 분석한다.

## 3. 연구자료 및 방법

### 3.1. 환경부·기후부 주간보도계획 자료

환경부·기후부 주간보도계획 자료는 2025년 3월 3일부터 2026년 5월 3일까지의 정부 공식자료를 사용했다. 본 분석은 출범 전 30주와 출범 후 30주를 동일한 기간 단위

로 맞췄다. 2025년 9월 29일~10월 5일 자료는 한 주 안에 환경부와 기후부 표기가 공존하고 에너지 직접 의제가 추가된 전환기 문서이므로 통계 본분석에서는 제외하고 정성 사례로만 다뤘다. 각 자료는 항목 단위로 분해했다. 코딩 변수는 주차, 기간, 출범 전후, 제목, 내용, 담당부서, 조직축, 분야 대분류, 에너지 직접 여부, 에너지 인접 여부, 기존 환경 의제 여부 등으로 구성했다.

### 3.2.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부 보완자료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부 공식 홈페이지의 대변인 정례발표 자료를 추가 수집했다(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 2025~2026). 산업부 자료는 환경부·기후부 주간보도계획과 양식이 다르며, 대변인 정례발표 실시 여부와 게시 방식에 따라 일부 주차는 공백이 있거나 합본 형태로 공개됐다. 따라서 산업부 자료는 환경부·기후부 본분석과 완전 대칭인 자료가 아니라, 에너지 업무 원소관 부처의 정책홍보 의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업무 이관축 보완분석으로 설정했다.

코딩 단위는 각 정례발표 자료의 “1. 보도 계획” 표에 제시된 개별 주제다. 출범 전 산업통상자원부 구간은 2025년 3월 10일~9월 22일 공식 게시자료 28주를 분석했고, 2025년 3월 3일과 5월 5일 주차는 공식 게시자료 공백으로 기록했다. 전환기인 2025년 9월 29일~10월 5일 자료는 본분석에서 제외했다. 출범 후 산업통상부 구간은 2025년 10월 20일~2026년 5월 1일 공식 게시자료 26주를 분석했고, 2025년 10월 6일, 10월 13일, 2026년 2월 16일, 3월 2일 주차는 공식 게시자료 공백으로 기록했다. 공백 주차는 임의로 0건 보간하지 않았다. 따라서 산업부 보완분석은 환경부·기후부 주간보도계획 분석과 동일한 강도의 직접 비교 자료가 아니라, 출범 전후 산업부 계열 공식 정책홍보 자료에서 에너지 직접 의제의 상대적 현저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하는 보조 근거로만 사용했다.

### 3.3. 빅카인즈 검색자료와 표본검증

빅카인즈 분석은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의 뉴스 검색 결과를 활용했다. 빅카인즈는 종합일간지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에서 수집한 뉴스 데이터베이스에 빅데이터 활용 분석기술을 접목한 뉴스 분석 서비스다(Korea Press Foundation, 2025). 본 연구는 지역 이슈와 방송 포맷 차이에 따른 변동을 줄이기 위해 전국일간지와

경제일간지만 대상으로 삼았다. 검색어 범위는 제목과 본문, 검색어 처리는 형태소 분석으로 고정했다.

빅카인즈 검색은 주간보도계획과 같은 기간을 적용했다. 출범 전 기간은 2025년 3월 3일~9월 28일이고, 출범 후 기간은 2025년 10월 6일~2026년 5월 3일이다. 출범 전 기관 승계 검색어는 “환경부”, 출범 후 기관 승계 검색어는 “기후에너지환경부 OR 기후부”로 설정했다. 업무 이관 맥락을 보완하기 위해 출범 전 “산업통상자원부 OR 산업부”, 출범 후 “산업통상부 OR 산업부”를 함께 검색했다. 주요 검색식은 보충자료에 제시했다.

빅카인즈 검색식의 타당도를 점검하기 위해 주요 검색 묶음 4개에서 각각 100건씩, 총 400건의 기사 표본을 무작위 추출해 수작업 검토했다. 검토 기준은 실제 관련 기사 여부, 에너지 직접 의제 해당 여부, 해당 부처의 주행위자 등장 여부, 단순 언급 여부로 구성했다. 각 기준은 상호배타적 범주가 아니라 검색식의 정밀도와 부처 맥락 포착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중복 가능 점검 항목이다. 표본검증 결과표는 보충자료에 제시했다.

### 3.4. 의제 범주와 코딩 규칙

본 연구의 의제 범주는 에너지 직접 의제, 에너지 인접 의제, 기존 환경 의제, 순수 환경 의제로 구분했다. 에너지 직접 의제는 전력망, 전력수급,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풍력, 태양광, 원전, 원자력, 고준위, 분산에너지, 전기요금, 계시별, 에너지효율, 히트펌프, 석탄발전, 전력계통 등 에너지정책 분류를 포착하기 위한 범주다. 에너지 인접 의제는 전기차,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차, 수소충전소, 배터리, 사용 후 배터리, 폐배터리, 바이오가스, 폐자원에너지, 수열, 조력발전, 충전기, 충전요금 등 환경정책과 에너지 전환이 맞닿은 항목으로 분류했다.

산업부 보완분석에서는 경계 사례를 별도로 검토했다. 전력·전력망·전력수급·재생에너지·원전 일반·수소·에너지 효율·ESS·석탄발전 전환은 에너지 직접 의제로 분류했다. 원전수출과 SMR 공급망은 에너지 직접성은 인정하되, 기후부 이관대상이라기보다 산업부 잔류 또는 혼합 영역으로 별도 표시했다. 석유비축, 도시가스, 원유·나프타, 에너지안보는 자원·연료 또는 에너지안보 범주로 분리해 확장 지표에서만 검토했다. 핵심광물, 희토류, CBAM, 탄소감축, 배터리, 전력반도체는 에너지 전환과 관련이 있어도 에너지 직접 의제로 과대계상하지 않고 에너지 인접 또는 자원·공급망 의제로 분리했다.

기존 환경 의제는 홍수, 하천, 댐, 녹조, 상수도, 하수도, 미세먼지, 오존, 대기환경, 자원순환, 플라스틱, 폐기물, 화학물질, 환경보건, 생물다양성, 국립공원, 멸종위기, 자연보전 등 환경부 고유 정책 영역으로 설정했다. 순수 환경 의제는 기존 환경 의제 검색식에서 에너지 직접 의제 검색어를 제외한 값으로 산출했다. 다만 원전·원자력·고준위 키워드는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다른 기관 맥락과도 결합될 수 있으므로, 특정 소관 부처의 독점 의제가 아니라 에너지 직접 의제의 언론 보도 맥락을 포착하는 검색어로 사용했다.

### 3.5. 코딩 절차, 정량 지표, 한계

항목 코딩은 단일 연구자가 수행했다. 환경부·기후부 주간보도계획과 산업부 대변인 정례발표 자료를 항목 단위로 다시 대조했고, 경계 사례는 별도 목록으로 재검토했다.

원자료 대조와 경계 사례 재검토를 중심으로 보완했으나, 별도 코더를 통한 2인 이상 독립코딩이나 표본 재코딩은 수행하지 못했다. 따라서 Cohen's kappa나 Krippendorff's alpha와 같은 코더 간 신뢰도 계수는 제시하지 않는다.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코드북, 공백 주차 처리 기준, 산업부 경계 사례 분류표를 보충자료로 제시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내용분석 결과는 단일 코더 기반의 체계적 분류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

본 연구는 출범 전후 의제 구성을 추론통계가 아니라 기술통계 방식으로 비교했다. 시점  $t$ 에서 의제  $i$ 의 항목 수 또는 기사 수를  $n(i,t)$ , 전체 항목 수 또는 전체 기사 수를  $N(t)$ 라고 할 때 의제 비중은  $p(i,t)=n(i,t)/N(t)$ 로 계산했고, 출범 전후 변화량은  $\Delta p(i)=p(i,after)-p(i,before)$ 로 산출했다. 본문 해석은 통계적 유의성보다 비중 변화의 방향과 크기, 그리고 부처 맥락 변화의 일관성에 초점을 둔다.

보조적으로 환경부·기후부 주간보도계획의 상호배타적 분야 대분류에 한해 HHI 방식의 집중도 지표와 정규화 Shannon entropy를 산출했다. 다만 빅카인즈 검색어 기반 범주는 의제 간 중복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HHI와 Shannon entropy는 빅카인즈 분석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빅카인즈 결과는 기사 프레임, 논조, 정책 평가 방향, 책임 귀속 구조를 직접 측정하지 않으므로 보도계획과 언론 보도 사이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의제 구성 변화의 방향성과 부처 맥락 재편 가능성을 확인하는 보조 지표로 해석한다.

## 4. 분석 결과

### 4.1. 환경부·기후부 주간보도계획의 에너지 현저성 변화

출범 전 환경부 주간보도계획에서는 30주 동안 453건의 항목이 추출됐다. 출범 후 기후부 주간보도계획에서는 30주 동안 542건이 추출됐다. 전체 항목 수는 453건에서 542건으로 19.6% 증가했고, 주당 평균 항목 수는 15.1건에서 18.1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변화는 총량보다 구성이다. 에너지 직접 의제는 출범 전 10건(2.2%)에서 출범 후 129건(23.8%)으로 증가했다. 이는 환경부·기후부 계열 주간보도계획상 에너지 직접 의제가 주변적 항목에서 핵심 의제군에 가까운 위치로 이동했음을 시사한다.

에너지 인접 의제는 출범 전 26건(5.7%)에서 출범 후 22건(4.1%)으로 큰 폭의 증가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출범 전 환경부도 이미 전기차, 수소차, 배터리, 폐자원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과 접한 환경 의제를 다뤘지만, 출범 후의 변화는 그 점점형 의제의 확대라기보다 전력망, 전력수급, 재생에너지, 원전, 전기요금 등 에너지정책 본류가 부처 보도계획 안으로 들어온 데서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분야 대분류 기준으로 전체 의제 분포를 보면, 출범 후 에너지 직접 의제가 커졌음에도 전체 분야 분포의 HHI는 0.153에서 0.110으로 낮아졌고, 정규화 Shannon entropy는 0.807에서 0.876으로 높아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말하는 에너지 현저성은 전체 의제가 한 범주로 수렴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특정 정책군, 특히 에너지 직접 의제의 상대적 비중이 커졌다는 의미다. 전체 분야 분포 차원에서는 오히려 에너지 세부 범주의 추가로 의제 구성이 다층

화됐다.

### 4.2.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부 보완분석

산업부 보완분석은 에너지 업무의 원소관 부처였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직접 의제가 어느 정도 정책홍보 현저성을 가졌는지, 그리고 기후부 출범 후 산업통상부에서 그 비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대변인 정례발표 자료 기준으로 출범 전 산업통상자원부 구간에서는 511건의 보도계획 항목이 확인됐고, 이 중 에너지 직접 의제는 85건(16.6%)이었다. 이 가운데 기후부 이관 대상성이 큰 전력이나 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효율·국내 원전·방폐물 관련 항목은 84건(16.4%)이었다. 에너지 직접 의제 85건과 이관대상 후보 84건의 차이는 원전수출·SMR 공급망 등 산업부 잔류 또는 혼합 성격으로 분류한 항목을 제외한 데서 발생한다. 이관대상 후보는 법령상 기후부 이관 범위에 가까운 전력·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효율·국내 원전·방폐물 항목으로 제한했다.

출범 후 산업통상부 구간에서는 479건의 항목 중 에너지 직접 의제가 9건(1.9%)으로 낮아졌다. 기후부 이관 후보로 볼 수 있는 항목은 4건(0.8%)에 그쳤다. 출범 후 산업통상부에 남은 에너지 직접 의제 9건 중 5건은 원전수출·SMR 공급망 또는 자원·연료 성격이 강한 항목으로 분류해 기후부 이관대상 후보에서는 제외했다. 석유비축, 도시가스, 원유·나프타, 에너지안보 등 자원·연료 성격의 항목까지 넓게 포함한 확장 지표에서도 출범 후 산업통상부의 에너지 관련 항목은 17건(3.6%)이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시기에는 에너지 직접 의제가 산업부 계열 정책홍보 의제의 중요한 축으로 나타났으나, 조직개편 이후 산업통상부 공식 보도계획에서는 에너지 직접 의제의 상대적 현저성이 낮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남은 항목은 주로 통상이나 산업·공급망·자원안보·표준·제조혁신 등 비에너지 직접 의제와 자원·연료 성격의 항목으로 구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 4.3. 기관 승계축과 업무 이관축의 결합 비교

환경부·기후부 본분석과 산업부 보완분석을 함께 놓으면 조직개편 전후 정책홍보 의제가 연결되는 부처 맥락의 변화가 더 구체적으로 관찰된다. 출범 전에는 환경부 주간보도계획에서 에너지 직접 의제 비중이 2.2%였던 반면,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정례발표 자료에서는 16.6%였다. 출범 후에는 기후부 주간보도계획에서 에너지 직접 의제

Table 1. Changes in Environment-MCEE weekly press-plan agenda items and retrospective organizational-axis classifications

| Indicator              | Before         | After          | Change          |
|------------------------|----------------|----------------|-----------------|
| Total press-plan items | 453            | 542            | +89 (+19.6%)    |
| Weekly average items   | 15.1           | 18.1           | +3.0 items/week |
| Energy-direct items    | 10<br>(2.2%)   | 129<br>(23.8%) | +119, +21.6%p   |
| Energy-adjacent items  | 26<br>(5.7%)   | 22<br>(4.1%)   | -4, -1.7%p      |
| Deputy 1 lineage items | 222<br>(49.0%) | 184<br>(34.0%) | -38, -15.1%p    |
| Deputy 2 lineage items | 41<br>(9.1%)   | 221<br>(40.8%) | +180, +31.7%p   |

Table 2. Supplementary coding of industry-ministry spokesperson briefing materials

| Period        | Source                   | Analyzed weeks | Total items | Energy-direct | MCEE transfer candidate | Note                                    |
|---------------|--------------------------|----------------|-------------|---------------|-------------------------|-----------------------------------------|
| Before launch | MTIE briefings           | 28 weeks       | 511         | 85 (16.6%)    | 84 (16.4%)              | 3.3 and 5.5 gaps not imputed            |
| Transition    | MTIE transition briefing | 1 week         | 19          | 2 (10.5%)     | 2 (10.5%)               | Excluded from main analysis             |
| After launch  | MOTIR briefings          | 26 weeks       | 479         | 9 (1.9%)      | 4 (0.8%)                | 10.6, 10.13, 2.16, 3.2 gaps not imputed |

비중이 23.8%로 높아졌고, 산업통상부 대변인 정례발표 자료에서는 1.9%로 낮아졌다. 이는 에너지 직접 의제가 새로 발생했다기보다, 에너지정책 본류가 제시되는 정책 홍보 부처 맥락이 산업부 계열에서 기후부 계열로 옮겨간 것과 일치하는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기후부 조직체계 기준으로 환경부·기후부 주간보도계획 항목을 재분류하면 조직축 변화도 확인된다. 출범 전 자료를 현 조직체계에 소급해 분류한 결과, 1차관 권역에 해당하는 물·자연·대기·자원순환·환경보건 등 기존 환경 의제는 222건(49.0%)이었다. 출범 후에는 184건(34.0%)으로 비중이 낮아졌다. 반면 2차관 권역에 해당하는 기후에너지정책실·에너지전환정책실 및 전력·재생에너지·원전·수소·열산업 관련 의제는 41건(9.1%)에서 221건(40.8%)으로 증가했다. 다만 이는 당시 실제 조직이 아니라 현 기후부 조직체계 기준의 역분류다.

2025년 9월 29일~10월 5일 환경부·기후부 전환기 주간보도계획은 본분석에서 제외했지만, 전환기의 의제 편입을 보여주는 사례로 의미가 있다. 해당 파일은 파일명에는 환경부가 남아 있었지만 문서 제목은 기후부 주간보도계획으로 바뀌어 있었고, 수정사항에는 기후부 출범,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위원회 개최, 전국 전력계통 관련 물량 배분, 연후 전력계통 비상대책 점검 등 에너지 직접 의제가 추가됐다.

#### 4.4. 빅카인즈 보조분석: 관계 부처 전체 보도와 부처 맥락

빅카인즈 검색 결과, 관계 부처 전체 보도량은 출범 전 35,435건에서 출범 후 29,449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에너지 직접 의제 보도량은 5,836건에서 6,272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 전체 보도에서 에너지 직접 의제가 차지한 비중은 16.5%에서 21.3%로 높아졌다. 이는 에너지 직접 의제 증가가 전체 보도량 증가로 설명되기 어렵고, 관계 부처 보도 안에서 에너지 의제의 상대적 비

중이 커졌음을 보여준다.

부처별로 나누면 에너지 직접 의제가 연결되는 부처 맥락의 변화가 더 뚜렷하게 관찰된다. 출범 전 환경부 기사 중 에너지 직접 의제는 1,658건으로 13.9%였으나, 출범 후 기후부 기사 중 에너지 직접 의제는 4,464건으로 39.0%였다. 반대로 산업부 계열 기사에서 에너지 직접 의제는 출범 전 4,917건(19.5%)에서 출범 후 2,261건(11.9%)으로 줄었다. 이는 에너지정책 본류가 산업부 보도 맥락에서 기후부 보도 맥락으로 이동한 것과 일치하는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중복 제거 묶음 검색에서는 부처 간 중복 언급 규모도 확인됐다. 출범 전 환경부 에너지 직접 기사 1,658건과 산업부 에너지 직접 기사 4,917건을 단순 합산하면 6,575건이지만, “환경부 OR 산업통상자원부 OR 산업부” 기준 묶음 검색 결과는 5,836건이었다. 약 739건은 두 부처가 함께 언급된 중복 기사로 추정된다. 출범 후에는 기후부 4,464건과 산업부 2,261건을 단순 합산하면 6,725건이지만, 묶음 검색 결과는 6,272건으로 약 453건이 중복으로 보인다. 단순 차감 기준으로 보면 출범 전에는 산업부 단독 언급 후보군이 컸고, 출범 후에는 기후부 단독 언급 후보군이 가장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표본검증 결과는 검색식이 에너지 직접 의제와 부처 맥락을 일정 수준 포착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이는 검색 결과의 정밀도 점검이지 전체 기사 모집단의 프레임·논조 검증은 아니다. 출범 전 산업부+에너지 검색묶음은 실제 관련 기사 93.0%, 에너지 직접 의제 88.0%, 부처 수행위자 78.0%로 나타났다. 반면 출범 후 기후부+에너지 검색묶음은 실제 관련 기사 92.0%, 에너지 직접 의제 86.0%, 부처 수행위자 75.0%로 높았다. 출범 전 환경부+에너지 검색묶음은 실제 관련 기사 75.0%, 에너지 직접 의제 65.0%, 부처 수행위자 25.0%였고, 출범 후 산업부+에너지 검색묶음은 실제 관련 기사 60.0%, 에너지 직접 의제 45.0%, 부처 수행위자 18.0%로 낮았다. 특히 출범 후 산

Table 3. Energy-direct agenda by ministry context in BIGKinds

| Ministry context                  | Total coverage | Energy coverage | Energy share |
|-----------------------------------|----------------|-----------------|--------------|
| Before: ministry of environment   | 11,895         | 1,658           | 13.9%        |
| After: MCEE                       | 11,456         | 4,464           | 39.0%        |
| Before: industry ministry lineage | 25,193         | 4,917           | 19.5%        |
| After: industry ministry lineage  | 19,064         | 2,261           | 11.9%        |

Table 4. Environmental and energy agenda in Environment-MCEE lineage

| Indicator                               | Before launch | After launch  | Change          |
|-----------------------------------------|---------------|---------------|-----------------|
| Total Environment/MCEE lineage coverage | 11,895        | 11,456        | -439 (-3.7%)    |
| Energy-direct agenda                    | 1,658 (13.9%) | 4,464 (39.0%) | +2,806, +25.0%p |
| Legacy environmental agenda             | 4,478 (37.6%) | 3,122 (27.3%) | -1,356, -10.4%p |
| Pure legacy environmental agenda        | 4,076 (34.3%) | 2,498 (21.8%) | -1,578, -12.5%p |

업부 계열 검색목음의 단순 언급 비율은 20.0%로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는 빅카인즈 수치를 기사 단위 귀속이나 책임 주체의 직접 측정값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 4.5. 기존 환경 의제의 상대적 비중

기존 환경 의제 검색 결과는 환경부·기후부 계열 기사 안에서 기존 환경 의제의 상대적 비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준다. 환경부·기후부 계열 기사에서 기존 환경 의제는 출범 전 4,478건(37.6%)에서 출범 후 3,122건(27.3%)으로 감소했다. 에너지 직접 키워드와 겹치는 기사를 제외한 순수 환경 의제도 4,076건(34.3%)에서 2,498건(21.8%)으로 줄었다. 반면 에너지 직접 의제는 1,658건(13.9%)에서 4,464건(39.0%)으로 증가했다. 기존 환경 의제와 에너지 직접 의제가 겹친 기사는 출범 전 402건에서 출범 후 624건으로 늘었다.

이 결과가 환경 의제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다. 검색어 기반 분석에서는 해상풍력과 생물다양성, 재생에너지와 환경영향, 전력망과 지역 환경 이슈처럼 에너지와 환경 의제가 한 기사 안에서 결합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검색식 기준으로는 에너지 직접 의제가 기존 환경 의제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변화가 관찰된다. 따라

서 이 결과는 환경부·기후부 계열 보도에서 기존 환경 의제의 비중이 낮아지고 에너지 직접 의제의 중심성이 높아진 변화와 일치한다.

## 5. 논의

### 5.1. 에너지 현저성의 변화와 업무 이관 효과

주간보도계획과 빅카인즈 결과는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환경부·기후부 주간보도계획에서는 에너지 직접 의제 비중이 2.2%에서 23.8%로 상승했다. 빅카인즈에서도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계열 기사 안에서 에너지 직접 의제 비중이 13.9%에서 39.0%로 높아졌다. 두 자료는 측정 대상이 다르다. 주간보도계획은 부처가 언론에 제시한 예정 의제이고, 빅카인즈는 언론이 생산한 기사 데이터다. 그럼에도 양쪽 모두 출범 후 에너지 직접 의제의 상대적 비중이 커지는 방향을 보였다.

산업부 보완분석은 이러한 해석을 더 구체화한다. 출범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정례발표 자료에서는 에너지 직접 의제가 16.6%를 차지했다. 출범 후 산업통상부에서는 이 비중이 1.9%로 낮아졌다. 이는 기후부 출범 후 에너지 의제가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다. 출범 전 산업부 계열에서 현저성을 갖던 에너지정책 본류가 출범 후 기후부 계열 정책홍보 공간에서 더 크게 드러난 변화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연구에서 중요한 점은 에너지 보도량 증가와 업무 이관 효과를 구분했다는 것이다. 만약 출범 전 환경부와 출범 후 기후부만 비교한다면, 환경부에는 원래 에너지정책 본류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출범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출범 후 산업통상부·산업부를 주간 보도계획 보완자료와 빅카인즈 검색자료에서 함께 검토했다. 관계 부처 전체 묶음 검색에서 에너지 직접 의제 보도량은 7.5% 증가하는데 그쳤으므로, 본 연구에서 관찰된 변화의 핵심은 전체 에너지정책 보도량 증가라기보다 에너지정책이 연결되는 부처 맥락의 재배치와 일치하는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 5.2. 기존 환경 의제의 상대적 위치와 정책커뮤니케이션 함의

기존 환경 의제의 상대적 비중 감소는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한다. 빅카인즈 검색 결과에서 순수 환경 의제는 4,076건에서 2,498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는 환경정책

자체가 축소됐다는 결론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조직개편 이후 환경 의제가 에너지 의제와 결합돼 보도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확인한 중복 기사 증가는 에너지와 환경의 결합 의제가 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책홍보와 보도 의제의 무게중심이 이동한 것과 일치하는 변화도 관찰된다. 환경부 시기에는 홍수, 하천, 대기, 자원순환, 화학물질, 생물다양성 등 전통적 환경 의제가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졌다. 기후부 출범 후에는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전기요금, 원전, 분산에너지 등이 같은 부처의 주요 의제로 등장했다. 이는 기사단의 취재 범위와 전문성 요구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후부 출범은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의 결합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PCC (2022)와 IEA (2023)가 강조하듯 온실가스 감축은 전력·산업·수송·건물 부문의 에너지 시스템 전환과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에너지 의제가 부처 보도계획의 중심으로 들어오면 전통적 환경 의제가 상대적으로 덜 보일 수 있다. 기후부가 에너지 전환의 실행력을 높이려면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보급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환경보건, 물관리, 화학안전, 자원순환 등 기존 환경 의제가 에너지 의제에 과도하게 종속되지 않도록 의제 균형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 5.3. 계절성과 외생 사건의 교란 가능성

출범 전후 비교에는 계절성과 외생 사건의 교란 가능성이 있다. 출범 후 분석 기간은 10월~5월을 포함하므로 겨울철 전력수요, 전기요금, 전력계통 안정, 예컨대 중동 정세에 따른 에너지 수급 이슈가 보도량과 의제 구성 변화에 일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산업통상부 보완자료에서도 원유·나프타 수급, 석유시장 점검, 도시가스 공급 등 자원·연료 의제가 별도 범주로 확인됐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찰된 변화를 조직개편의 직접 효과로 단정하지 않고, 조직개편 전후 부처별 정책홍보 의제와 보도 맥락이 재배치된 것과 일치하는 변화로 해석한다.

### 5.4. 지표화 접근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의 추가적 의의는 보도계획과 보도량을 정성적 인상이나 사례 나열에 그치지 않고, 항목 수, 기사 수, 의제 비중, 비중 변화량이라는 관측 가능한 지표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표화는 조직개편 전후 정책홍보 의제와 언론 보도 맥락의 변화를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제

시한다. 다만 이러한 지표는 의제 분포의 구조를 보여주는 보조값으로 해석해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사 원문 기반 프레임 분류, 인용 주체 네트워크, 문장 단위 논조 분석을 결합해 지표의 설명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프레임 분석을 수행하지 않은 본 연구는 Entman (1993)이 말한 문제 정의·원인 진단·도덕 평가·처방 제시의 차원을 직접 측정하지 않았고, Shoemaker and Reese (2014)가 강조한 뉴스 생산 구조의 층위별 영향도 직접 검증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의 결론을 검색식 기반 보도량과 부처 맥락 변화의 관찰 결과로 제한해야 함을 뜻한다.

## 6. 결론

본 연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전후 부처 정책홍보 의제의 에너지 현저성과 전국일간지·경제지의 보도량 및 부처 맥락 변화를 분석했다. 환경부·기후부 주간보도계획에서 에너지 직접 의제는 출범 전 10건(2.2%)에서 출범 후 129건(23.8%)으로 증가했다. 산업부 보완분석에서는 출범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정례발표 자료에서 에너지 직접 의제가 85건(16.6%)이었으나, 출범 후 산업통상부에서는 9건(1.9%)으로 낮아졌다. 빅카인즈 보조분석에서도 관계 부처 전체 보도량은 줄었지만 에너지 직접 의제 보도량은 증가했고, 전체 관계 부처 보도에서 에너지 직접 의제가 차지한 비중은 16.5%에서 21.3%로 상승했다. 환경부·기후부 계열 기사에서는 에너지 직접 의제 비중이 13.9%에서 39.0%로 높아졌으며, 산업부 계열에서는 19.5%에서 11.9%로 낮아졌다.

이 결과는 기후부 출범 전후에 단순한 부처명 변경을 넘어 정책홍보 의제와 언론 보도 맥락의 재배치와 일치하는 변화가 관찰됐음을 시사한다. 출범 전에는 에너지정책 본류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정책홍보 의제와 보도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고, 환경부는 에너지 인접 의제를 일부 다뤘다. 출범 후에는 전력망, 재생에너지, 원전, 전기요금, 전력계통 같은 에너지 직접 의제가 기후부의 주간보도계획과 언론 보도 안에서 주요 축으로 관찰됐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조직개편의 직접 효과를 검증한 것이 아니라, 조직개편 전후 정책홍보 의제와 언론 보도 부처 맥락에서 관찰된 방향성의 일관성을 기술한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도 분명하다. 첫째, 산업부 보완분석은 대변인 정례발표 자료를 활용했으나, 환경부·기후부 주간보도계획과 문서 양식 및 게시 체계가 다르다. 둘째, 항목

코딩은 단일 연구자가 수행했으므로 코더 간 신뢰도 계수를 제시하지 못했다. 셋째, 부처명 검색은 해당 부처가 기사의 주행위자인 경우와 단순 배경으로 언급된 경우를 완전히 구분하지 못한다.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요 검색목록 400건의 기사 표본을 수작업 검토했지만, 이는 검색식 타당도 점검을 위한 보조 절차이며 전체 기사에 대한 프레임·논조·책임 귀속 분석을 대체하지 않는다. 넷째, 본 연구는 주차별 시계열 상관분석도 수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주간보도계획과 실제 보도 사이의 인과관계나 시차 효과는 단정할 수 없다.

후속 연구는 2인 이상 독립코딩, 기사 원문 표본검증, 주차별 시계열 분석, 인용 주체와 보도 톤 분석을 결합해 조직개편과 언론 의제 변화의 관계를 더 정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Cobb RW, Ross JK, Ross MH. 1976. Agenda building as a comparative political process. *Am Polit Sci Rev* 70(1): 126-138. doi: 10.2307/1960328
- Dearing JW, Rogers EM. 1996. *Agenda-setting*.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and Net Zero. 2024.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3-24. London: UK Government; [accessed 2026 May 13].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desnz-annual-report-and-accounts-2023-to-2024>
- Entman R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 Commun* 43(4): 51-58. doi: 10.1111/j.1460-2466.1993.tb01304.x
- Gandy OH Jr. 1982. *Beyond agenda setting: Information subsidies and public policy*. Norwood, NJ: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 IEA. 2023. *World energy outlook 2023*. Paris: International Energy Agency; [accessed 2026 May 13]. <https://www.iea.org/reports/world-energy-outlook-2023>
- IPCC. 2022. *Climate change 2022: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II to the six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doi: 10.1017/9781009157926
- IRENA. 2023. *World energy transitions outlook 2023: 1.5°C pathway*. Abu Dhabi: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accessed 2026 May 13]. <https://www.irena.org/Publications/2023/Jun/World-Energy-Transitions-Outlook-2023>
- Kiousis S, Mitrook M, Wu X, Seltzer T. 2006. First- and second-level agenda-building and agenda-setting effects: Exploring the linkages among candidate news releases, media coverage, and public opinion during the 2002 Florida gubernatorial election. *J Public Relat Res* 18(3): 265-285. doi: 10.1207/s1532754xjpr1803\_4
- Kiousis S, Popescu C, Mitrook M. 2007. Understanding influence on corporate reputation: An examination of public relations efforts, media coverage, public opinion, and financial performance from an agenda-building and agenda-setting perspective. *J Public Relat Res* 19(2): 147-165. doi: 10.1080/10627260701290661
- Korea Press Foundation. 2025. *BIGKinds user manual* (in Korean). Seoul: Korea Press Foundation.
- McCombs ME. 2005. A look at agenda-setting: Past, present and future. *Journalism Stud* 6(4): 543-557. doi: 10.1080/14616700500250438
- McCombs ME, Shaw DL. 1972.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mass media. *Public Opin Q* 36(2): 176-187. doi: 10.1086/267990
-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2025 Sep 30. Launch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leading the transition to a decarbonized green civilization (in Korean) [Press release]; [accessed 2026 May 13]. <https://www.mce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598&boardMasterId=939&boardCategoryId=&boardId=1772550>
-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5a.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ct No. 21065: reasons for amendment (in Korean); [accessed 2026 May 13].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chrClsCd=010102&lsId=005682>
-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5b.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 and

- its affiliated agencies, Presidential Decree No. 35803: reasons for enactment (in Korean); [accessed 2026 May 13].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102&lsId=011781>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 2025-2026. Spokesperson regular briefing materials (in Korean); [accessed 2026 Jun 12].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2472ce1e5>
- National Audit Office. 2024. 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and net zero: Departmental overview 2022-23. London: National Audit Office; [accessed 2026 May 13]. <https://www.nao.org.uk/overviews/department-for-energy-security-net-zero-2022-23/>
- Shoemaker PJ, Reese SD. 2014. Mediating the message in the 21st century: A media sociology perspective, 3rd edn. New York: Routledge.
- Turk JV. 1986. Information subsidies and media content: A study of public relations influence on the news. *Journalism Monogr* 100: 1-29.
- Weaver DH, Elliott SN. 1985. Who sets the agenda for the media? A study of local agenda-building. *Journalism Q* 62(1): 87-94. doi: 10.1177/107769908506200113

## 부록

## Appendix 1. Major BIGKinds search queries and manual validation

Before-launch related-ministry total coverage: (환경부 OR 산업통상자원부 OR 산업부). After-launch related-ministry total coverage: (기후에너지환경부 OR 기후부 OR 산업통상부 OR 산업부). Energy-direct agenda query: (전력망 OR 전력수급 OR 전력수급기본계획 OR 재생에너지 OR 해상풍력 OR 풍력 OR 태양광 OR 원전 OR 원자력 OR 고준위 OR 분산에너지 OR 전기요금 OR 계시별 OR 에너지효율 OR 히트펌프 OR 석탄발전 OR

전력계통). Legacy environmental agenda query: (홍수 OR 하천 OR 댐 OR 녹조 OR 상수도 OR 하수도 OR 미세먼 지 OR 오존 OR 대기환경 OR 자원순환 OR 플라스틱 OR 폐기물 OR 화학물질 OR 환경보건 OR 생물다양성 OR 국립공원 OR 멸종위기 OR 자연보전). 주요 빅카인즈 검색식, 수작업 표본검증표, 본분석 및 보완분석의 세부 코 드북은 보충자료로 제시했다.

Table A1. Manual validation of BIGKinds search results

| Search set                                      | Sample | Relevant   | Energy-direct | Ministry actor | Mere mention |
|-------------------------------------------------|--------|------------|---------------|----------------|--------------|
| Before launch: Ministry of Environment + energy | 100    | 75 (75.0%) | 65 (65.0%)    | 25 (25.0%)     | 12 (12.0%)   |
| After launch: MCEE + energy                     | 100    | 92 (92.0%) | 86 (86.0%)    | 75 (75.0%)     | 5 (5.0%)     |
| Before launch: Industry ministry + energy       | 100    | 93 (93.0%) | 88 (88.0%)    | 78 (78.0%)     | 4 (4.0%)     |
| After launch: Industry ministry + energy        | 100    | 60 (60.0%) | 45 (45.0%)    | 18 (18.0%)     | 20 (20.0%)   |

Note: Categories are overlapping validation criteria and do not sum to 100%. Values in parentheses indicate the share within each 100-article sample.

## Appendix 2. Codebook summary for main and supplementary analyses

Table A2. Codebook summary for the main analysis

| Category                    | Operational definition                                                                                                          | Examples / coding note                                                                                                                                                                                          |
|-----------------------------|---------------------------------------------------------------------------------------------------------------------------------|-----------------------------------------------------------------------------------------------------------------------------------------------------------------------------------------------------------------|
| Energy-direct               | Core energy-policy agenda items directly related to electricity, energy supply, energy transition, or energy-system governance. | Power grid, power supply-demand, renewable energy, offshore wind, solar PV, nuclear power,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tributed energy, electricity rates, energy efficiency, coal-fired power transition. |
| Energy-adjacent             | Boundary items between environmental policy and energy transition but not treated as core energy-policy agenda items.           | EVs, hydrogen vehicles, charging stations, batteries, used batteries, biogas, waste-to-energy, water-source heat, tidal power, chargers, charging fees.                                                         |
| Legacy environmental        | Traditional environmental-policy agenda areas associated with the former Ministry of Environment lineage.                       | Floods, rivers, dams, algal blooms, water supply, sewage, fine dust, ozone, resource circulation, waste, chemicals, environmental health, biodiversity, national parks, nature conservation.                    |
| Pure legacy environmental   | Legacy environmental agenda after excluding overlap with the energy-direct agenda.                                              | Legacy environmental query combined with NOT energy-direct query.                                                                                                                                               |
| Deputy 1 / Deputy 2 lineage | Retrospective organizational-axis classifications based on the current MCEE structure.                                          | Deputy 1: water, nature, air, resource circulation, environmental health. Deputy 2: climate and energy policy, energy transition, grid, renewable energy, nuclear, hydrogen, heat industry.                     |

Table A3. Codebook summary for industry–ministry supplementary analysis

| Field / Category                    | Coding rule                                                                                                                                                                                          | Examples/notes                                                                   |
|-------------------------------------|------------------------------------------------------------------------------------------------------------------------------------------------------------------------------------------------------|----------------------------------------------------------------------------------|
| Coding unit                         | One item in the “1. 보도 계획” table of each spokesperson briefing.                                                                                                                                      | Minister schedules and policy-meeting lists excluded from total count.           |
| Energy-direct main                  | Electricity grid, power supply, renewable energy, nuclear, hydrogen, energy efficiency, ESS, coal phase-out transition.                                                                              | Nuclear export and SMR treated as energy-direct but not as MCEE transfer target. |
| MCEE transfer candidate             | Energy-direct items likely transferred to MCEE, including electricity, renewable energy, hydrogen, energy efficiency, domestic nuclear/waste items.                                                  | Petroleum, gas, minerals, nuclear export, and SMR supply chains excluded.        |
| Energy adjacent / Resource-security | Battery, EV industrial policy, CBAM, carbon reduction, GX, circular economy, power semiconductors; petroleum reserves, crude oil, naphtha, city gas, critical minerals, energy-security cooperation. | Reported separately to avoid overcounting energy-direct agenda.                  |
| Gaps                                | Official non-posted or unavailable weeks were recorded as gaps and not imputed as zero.                                                                                                              | Pre: 3.3, 5.5; Post: 10.6, 10.13, 2.16, 3.2.                                     |

Table A4. Boundary–case handling for ambiguous agenda items

| Boundary case                                              | Treatment in this study                                                                                               | Reason for treatment                                                                                                                                                                                                  |
|------------------------------------------------------------|-----------------------------------------------------------------------------------------------------------------------|-----------------------------------------------------------------------------------------------------------------------------------------------------------------------------------------------------------------------|
| EV charging, batteries, used batteries                     | Energy-adjacent unless the item primarily concerns electricity-system policy.                                         | These items connect environmental policy and energy transition but can overstate core energy-policy salience if counted as energy-direct.                                                                             |
| Offshore wind and renewable-energy environmental impact    | Energy-direct when the main policy object is renewable deployment; legacy/environmental overlap noted where relevant. | The same issue may combine energy infrastructure with environmental assessment or biodiversity concerns.                                                                                                              |
| Nuclear export and SMR supply chains                       | Energy-direct in broad industry-ministry coding, but not counted as MCEE transfer candidate.                          | These areas may retain an industry, export, or mixed jurisdictional character after the reorganization, depending on whether the item concerns domestic nuclear policy, export promotion, or industrial supply chains |
| Petroleum reserves, crude oil, naphtha, city gas           | Resource/security or extended energy-related category, not core energy-direct transfer item.                          |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excluded major resource-related affairs from MCEE transfer scope.                                                                                                                     |
| Critical minerals, rare earths, CBAM, power semiconductors | Energy-adjacent or resource/supply-chain category.                                                                    | They are related to energy transition but primarily concern industry, trade, or supply-chain policy.                                                                                                                  |